



보도자료

www.kipa.re.kr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0. 7. 29. (수)	작성부서	국정평가연구실
배포부서	기획조정본부 대외협력실	연구책임자	이환성 연구위원 (02-2007-0691) 황혜신 선임연구위원 (02-2007-0564) 임다희 초청연구위원 (02-2007-0618) 오화선 연구원 (02-2007-0588) 이정혁 연구보조원

“긴급재난지원금의 쟁점과 설계”

전 세계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대봉쇄(Great Lockdown)로 인한 금번의 경제위기는 1930년대의 대공황(Great Depression)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의 대침체(Great Recession)에 비견될 정도로 심각하다. 세계경제는 멈춰 섰으며, 대부분의 국가가 유례없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못하고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제위기 속에서 일자리 감소를 막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계안정과 소비촉진을 위해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비수요 감소와 취약계층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안성호)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추가지급에 대한 주요쟁점을 살펴보기 위해 이슈페이퍼(코로나19 이후 긴급재난지원금의 쟁점과 설계)를 발간하였다.

이슈페이퍼에서 저자는 추후에 지급될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채무의 급증으로 인한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 즉 보편적 지원에서 선별적 지원으로 지급방식을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선별적 지원을 위한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나의 정책적 기준으로 잠재성장률 대비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연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선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기준은 심각한 경제침체로 인하여 경제성장률 예상치가 잠재성장률을 크게 밑돌게 되면 자동으로 보편적 지원으로 지급방식이 전환되는 특징을 가진다.

우리나라 국민의 51.1%는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에 찬성하고 있다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반'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우리국민의 51.1%는 찬성, 40.3%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6%)¹⁾
 - 찬성의견이 과반 수 이상이지만, 반대의견 역시 높은 상황임

그렇다면, 정부의 재난지원금의 추가지급은 과연 필요한가?

- 코로나 쇼크의 장기화로 인해 경기침체가 글로벌 금융위기(Great Recession)와 대공황(Great Depression)에 버금가는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 IMF는 코로나19 사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의 대침체(Great Recession)와 1930년대의 대공황(Great Depression)을 넘어서는 경제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이 최대 -8%까지 하락할 것이라 전망,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이자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3배 가파른 경기침체임
- 세계경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국경제
 - 세계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한국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경제성장률 하락, 비우호적인 대외수출여건 등으로 잠재성장률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됨
 - 국회 예산정책처는 경제성장률 하락의 영향으로 향후 5년간(2020~2024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2.3%로 이전 5년(2015~2019년)보다 0.5% 하락할 것으로 분석하였음
 - 또한, 우리나라의 경기침체와 일자리 감소가 2020년을 넘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주요국 대비 비교적 낮은 폭의 하락이 전망되고 있으나,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체감 경기침체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
- ▶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소비수요 감소와 취약계층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의 추가지급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1) 머니투데이(2020.06.04.), “국민 절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찬성”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효과적이었나?

□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었다

-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가계의 소비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 특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매출 회복에 긴급재난지원금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점을 감안했을 때 투입예산 대비 효과 측면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 정부는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해 막대한 국채를 발행하였음
- 중·상위 소득계층의 경우 정부가 원하는 만큼의 소비수요 창출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

□ 향후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채무의 급증으로 인한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한다

- OECD는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이 추가 조치가 가능한 상태라고 분석하면서도 분배 개선과 경제적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함

추가 재난지원금,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

-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감안할 때 선별적 지원을 위한 지급대상 선정기준이 필요하다

- 예상되는 잠재성장률과 실질경제성장률(잠재성장률 대비 실질경제성장률)을 연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을 하나의 준칙으로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 즉, 한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해서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인 잠재성장률과 코로나19로 인해 낮아진 실질경제성장률의 차이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마련되면, 추가지원 시 행정낭비를 줄이고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음

<표> 잠재성장률(2.3% 가정) 대비 -1% 하락/소득하위 10% 연계방안에 의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예시)

잠재성장률 대비 경제성장률 예상치	2020년 하반기 경제성장률 예상치(연간기준)	지급대상
잠재성장률 이상	2.3% 이상	없음
잠재성장률 대비 -1%이내 하락	1.3% 이상 ~ 2.3% 미만	소득하위 10%
잠재성장률 대비 -2%이내 하락	0.3% 이상 ~ 1.3% 미만	소득하위 20%
잠재성장률 대비 -3%이내 하락	-0.7% 이상 ~ 0.3% 미만	소득하위 30%
잠재성장률 대비 -4%이내 하락	-1.7% 이상 ~ -0.7% 미만	소득하위 40%
잠재성장률 대비 -5%이내 하락	-2.7% 이상 ~ -1.7% 미만	소득하위 50%
잠재성장률 대비 -6%이내 하락	-3.7% 이상 ~ -2.7% 미만	소득하위 60%
잠재성장률 대비 -7%이내 하락	-4.7% 이상 ~ -3.7% 미만	소득하위 70%
잠재성장률 대비 -8%이내 하락	-5.7% 이상 ~ -4.7% 미만	소득하위 80%
잠재성장률 대비 -9%이내 하락	-6.7% 이상 ~ -5.7% 미만	소득하위 90%
잠재성장률 대비 -9%초과 하락	-6.7% 미만	소득하위 100%

- 실제 재정준칙을 설정함에 있어 정부의 재정상황과 경제침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재성장률과 경제성장률의 차이에 의한 지급대상 기준을 탄력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시, 금액은 전과 동일하게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수준에 대하여 큰 논란이 없었음
 - 만일 소득하위 50%를 대상으로 할 경우 지급규모는 7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됨. 이에 대한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 결국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지급형태 및 지급방식은 전과 동일하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현금 등의 형태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
 -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방식 중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품권의 경우도 지급대상 국민의 약 7.2%가 신청함
 -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각 지급유형은 국민의 다양한 선호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됨

[첨부]

한국행정연구원 이슈페이퍼 통권 94호

“코로나19 이후 긴급재난지원금의 쟁점과 설계”